

우리의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듭니다

[행복한 일자리]

일자리 늘·자·오 정책으로 희망 새싹을 키워갑니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국민행복 국가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늘(늘리고) · 지(지키고) · 오(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창조경제의 실현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나눔형 동반고용전략을 추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로 우리나라 경제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하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관찮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강화하고,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늘·지·오 정책을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15~64세의 고용률을 EU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까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술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누리의 진단

- 과학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미쳐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시대적 사명을 지님.
- 기존 제조업 중심의 전통산업은 ‘고용없는 성장’ 추세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 한계
-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활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 추진

새누리의 약속

-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국민행복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
- 농업, 제조업 등 기존 전통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포함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 新산업으로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비스업에도 과학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함.
- 다양한 근무형태, 고용형태의 스마트워크 추진

새누리의 실천

- 관련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창조형 중소기업이 꽃피는 창업국가 코리아

새누리의 진단

-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산업 및 첨단산업과 관련된 창업 부족
- 창업에 대한 지원이 미진하고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환경 미흡

새누리의 약속

- 대학의 창업기회화를 통한 청년창업가 양성
-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을 체계적으로 통섭한 융합인재 양성
- 실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은퇴전후의 경영·기술인력 창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
- 산학 공동연구물 소유권의 합리적 조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의무화 등 창조적 인재 보호
-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 활성화
- 콘텐츠 펀드 규모 확대 및 프로젝트 개발 지원

새누리의 실천

-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정비 및 대학 지원 계획 수립
- 엔젤투자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 콘텐츠 펀드 등을 위한 법 개정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새누리의 진단

- 직무와 상관없는 학벌이나 스펙 때문에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
- 불필요한 스펙쌓기에 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

새누리의 약속

- 모든 직종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표준화한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제공
-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
 -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취업 지원

새누리의 실천

- '스펙초월 청년채용아카데미' 운영 중(2012.9~2013.9 1년간 시범운영 현재 230여명 참여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대한민국 청년이 세계를 움직이는 K-Move

새누리의 진단

- 글로벌화가 되면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나 국가의 지원은 미진하고 해외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 정부가 공신력 있는 해외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자의 요구에 맞는 해외 취업 시스템을 구현할 필요성 증가

새누리의 약속

- 해외 벤처캐피탈 유치 등 벤처육성
- KOTRA와 KOICA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인력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정부의 해외취업장려금제도 도입
-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 선발 후 멘토들과 연결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찾아주는 글로벌 스펙초월시스템 마련

새누리의 실천

- 2013년부터 해외취업 DB 구축 및 예산 반영
- 스펙초월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 지원

근로시간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동반성장 전략 추진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 우리나라 근로자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 1,749시간 보다 4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
- 장시간 노동체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운영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로시간 한도 지키기, 휴일 근로 초과근로시간 산입,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축소,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교대제 개편 등 정책 추진
- 2020년까지 연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단축하여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새누리의 실천

- 「근로기준법」의 초과근로시간 규정 보완 및 근로감독 강화
-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 정책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7.6%(2011년 기준)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고, 청년 고용률도 40.5% 수준으로 낮은 상태
-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스로 취업의 희망과 의지조차 잃어버린 청년층이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창업기획사'를 설립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층 창업아이디어 발굴, 창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등 지원
- 정부와 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청년창업펀드를 만들어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패자부활 기회 부여

새누리의 실천

- 청년창업기획사 및 청년창업펀드 설립 및 운영 정책 지원

공공부문에서 청년층 일자리 확대

새누리의 진단

- 복지제도 확충,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필요
- 청년층이 가고 싶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 취업 기회 확대 필요

새누리의 약속

- 특수교사, 사회복지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경찰, 소방관, 복지 분야 일자리를 확대
- 공공부문에 컴퓨터 통신보안을 위한 인력채용 기준을 제시하여 공공부문 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

새누리의 실천

-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
- 공공부문 청년층 채용을 공공부문 평가에 반영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강화

새누리의 진단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구조조정 등 고용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고용안정 정책 추진 필요
- 기업 경영 악화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리해고 최소화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정리해고 전 업무재조정,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 강화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여 일이 많을 때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기에 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경기변동에 대비한 고용안정 도모

새누리의 실천

-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제도 관련 규정 개정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새누리의 진단

-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와 같이 대기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경우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됨.
-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기존의 고용보험이나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재취업 직업훈련, 실직자 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새누리의 약속

- 대기업 또는 특정 업종에서 대규모 정리해고 발생시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에서 특별예산지원을 통해 정리해고 피해 최소화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기존 고용보험 및 지자체 예산과 정부의 재정지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정리해고자 전직훈련, 생활비, 재취업 지원을 실시

새누리의 실천

- ‘고용재난지역’ 선포 시 예산지원 규정 등 신설

정년연장 및 중장년층 교육훈련 확대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약 53세로 고령층 일자리 문제 심각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중장년층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고령층 일자리 창출 및 은퇴 후 '인생 이모작' 준비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실제 정년을 60세로 연장
- 장년층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하여 고령층 일자리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로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활성화
- 은퇴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회봉사활동 지원

새누리의 실천

-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60세 정년 법제화
- 장년층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신설 및 예산 지원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는 임금근로자의 1/3이 비정규직으로, OECD 국가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편
- 2007년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을 시행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 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정규직 전환율은 낮음.
- 제조업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고용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새누리의 약속

-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함.
-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

새누리의 실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새누리의 진단

-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내하도급 계약 변경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사내하도급이 적법한 도급일 경우,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나 고용안정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제조업 등에서 사내하도급 형태로 위장해서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존재

새누리의 약속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원청업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할 경우 차별적 처우 금지
- 사내하도급 계약 만료시에 사내하도급 사업주가 교체되더라도 기존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보호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

새누리의 실천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제정
-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받은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누리의 진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이나 재해 위험이 높고, 노후대비도 취약하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40% 수준에 불과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25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가입률이 높은 상태

새누리의 약속

-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함.
- 월급여 130만원 미만(2013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적용 확대

새누리의 실천

- ‘비정규직 사회보험 지원사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0여만명의 보험료 정부지원

특수고용직 근로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

새누리의 진단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
 - ※ 특수고용직 근로자 :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보험모집인, 택배(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 텔레마케터 등
-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 고용 불안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호가 절실함에도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현재 골프장 캐디 등 일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

새누리의 약속

- 특수고용직 근로자 현실에 맞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제도를 설계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 사회안전망 확대
- 특수고용직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새누리의 실천

-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적용대상에 포함
-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현실에 맞는 고용보험제도 신설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하여 근로자 기본생활 보장

새누리의 진단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
-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최저임금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매년 노사갈등이 반복됨.

새누리의 약속

-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 최저임금제도가 노동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되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새누리의 실천

- 「최저임금법」 개정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새누리의 진단

- 노사관계 현장에서 노사갈등 발생시 힘과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교섭문화 정착 필요
- 경기침체에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

새누리의 약속

- 노사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 일자리 만들기, 비정규직 보호, 노동기본권 강화 등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
-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노사 대표와 만나 노동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대책 논의

새누리의 실천

-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
-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합리적 보완

새누리의 진단

- 2010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적정성 문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원칙의 시행으로 소수 노조의 교섭권 제약 문제 등의 쟁점 제기

새누리의 약속

-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쟁점들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제도보완 방안 도출
-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한 노사관계 법 제도 정착

새누리의 실천

-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복수노조 제도 보완방안 논의
-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